

월요광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결국은 문화력이다

것을 암시하는 전주곡이었다. 이후 한류 바람은 중국을 넘어 아시아로 이어졌다. 동남아 국가들은 앞다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K-POP)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현란한 안무를 구사하는 ‘소녀시대’ 춤사위 위아시아 각국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아시아 한류의 성공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서구적 멜로디와 영상에 길들여졌던 아시아인들에게 드라마와 아이돌로 대표되는 초기 한류 콘텐츠는 그들 정서에 맞는 친근함을 제공했다. 다시 말해 ‘문화 코드(culture code)가 잘 맞았던 것이다.

한류의 성공은 소위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한국에 일깨워 줬다. 소프트 파워란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의미한다. 한류 스타가 입는 옷과 액세서리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와 우리 역사를 공부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케이팝·예능·드라마·문학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장르는 보다 다양해지고 아시아·미국·중동·유럽·남미 등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한류가 진화하면서 이제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내고 있다.

좋은 브랜드 이미지는 높은 경제적 수위로 연결된다.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들이

쏟아 온 고급스러운 가치의 이면에는 프랑스를 떠올리게 하는 문화의 힘이 스며 있다. 경제와 문화의 융합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져 더 높은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동남아에서 케이팝이 인기를 얻자 한국의 화장품·의류·휴대전화기 이 지역으로 더 많이 수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제품을 고급스럽게 인식하는 질적 변화로도 이어졌다.

21세기는 바로 이러한 문화의 힘, 즉 문화력(文化力·cultural power)의 시대다. 콘텐츠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문화의 힘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문화력은 그 나라에 얼마나 끌리는지를 측정하는 매력의 척도이고, 그 나라의 상품 구매하게 만드는 경제적 효과로 환산된다. 이처럼 우리 문화콘텐츠는 우리가 만드는 상품의 판매와 구매국의 소비 트렌드,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광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세안 화장관회의에서도 ‘문화와 창조경제’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문화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많은 국가들이 창조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문화융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혁신 모델을 국정 기조로 삼아 지난 3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각국의 청년들이 새로운 상상력과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 낼 ‘글로벌 문화력’이다. “케이팝은 세

계의 음(音)을 아시아 식으로 재편해 보편적인 감성을 느끼게 한다”는 프랑스 경제학자 지 소르망의 말처럼, 고유함과 보편성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새로운 가치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국가의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각국의 공동 노력은 세계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만나 혁신적인 생각을 현실로 발전시키는 공식적 네트워크 협의체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촌 모두가 서로가 가진 발전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정한 창조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적 전통과 다양성을 가진 국가들 간 상호협력의 결과는 어느 한 국가에만 머물지 않고 인류 전체의 문화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석학 이영덕 선생이 쓴 칼럼은 문화력의 중요성을 잘 일러준다. “미래학자 지크 아탈리는 이미 2006년에 앞으로 세계를 이끌게 될 11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2025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두 배로 늘 것이며 탁월한 기술력과 문화의 역동성은 세계를 매혹시킬 것이다.” 평생을 ‘문화쟁이’로 살아온 한 노학자의 고백처럼, 전환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결국 문화력이다.

법조칼럼



황재동 광주지검 검사

디지털 증거법 시대의 개막

핵심증거일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복잡한 증거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진술·이메일 등을 확보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범위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전문(傳聞)증거’의 경우가 그렇다. 다시 말해 ①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그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②경험자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억·표현 또는 서술의 과정에서 잘못이 개입될 여지가 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증거들이 모두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형사재판 중 검사나 컴퓨터·USB에 저장된 파일·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피고인이 이 디지털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면, 검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파일 작성자를 범정에 불러 파일들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때, 파일 작성자가 범정에서 “그것들은 내가 작성한 파일이

아닙니다”라고 하거나 답변을 거부해버리면 이전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범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파일 작성자의 말 한마디로 증거능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

그런데, 파일의 작성자는 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이메일계정·스마트폰임에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걸까? 그건 대부분 파일 작성자가 범죄혐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인정할 경우 이로 인해 범죄혐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로 문서를 작성하던 시절에는 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타인의 명의를 손쉽게 동용하여 동일 내용의 서류를 만들 수 있었기에 범정에서 문서의 작성자에게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컸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특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이 완료된 상태에서 많은 파일들을 생성해 내기 때문에 각 파일에 작성명의자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그 파일들을 작성했는지 알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전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기술발전 때문에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범죄혐

의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5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파일의 작성자가 범정에 나와 자신이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를 수집해 분석하는 구체적인 기술 내지 일련의 절차)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이나 이메일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파일작성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①디지털 증거가 보관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USB·스마트폰)의 소유·관리·사용관계 ②디지털 증거의 작성 일시·장소에 작성자가 있었다는 사실 ③디지털 증거의 작성 전후에 그 작성에 사용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작성자가 이용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디지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이 증거법이 개정되고 진정한 디지털 증거 세상이 도래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社說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보도 통제’란 말인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었고제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시근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은 현 정권의 보도 통제 실태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녹취록에는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봤네”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전 수석이 다른 무엇보다 오경우 대통령에 불편한 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심한 일이다.

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3년 4월21일에도 이 전 수석은 전화를 걸었다. 구조가 우선순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방송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데 사과하고, 이제 해임된 뒤 “청와대 쪽이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은 김

전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이 수석이 한 일련의 발언은 KBS를 권력에 대한 감시를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생각하는 청와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었던 ‘보도지침’의 부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 어디 유신독재 시절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라고 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답변이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 보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방송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데 사과하고, 이제 해임된 뒤 “청와대 쪽이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은 김

잇단 경찰관들의 성범죄...누굴 믿어야 하나

최근 부산에서 30대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동료 여경에 대한 성폭력까지 저지른 경우도 있다.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도덕의 문란과 타락은 매우 심각하다. 이 중에서 경찰관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시켜줄 것처럼 회유해 여성 민원인에게 성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그 어떤 흉악 범죄 못지않은 악랄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약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는 한 참 뒤에야 드러나기도 한다. 전남 경찰청 소속 모 경위는 지난해 자신이 담당하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항응을 받았다가 들들나 파면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에서도 두 명의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과 불건전한 관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져 각각 감봉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사건 관계자외의 이성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 경찰 가운데 일부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을 했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자를 검거해 처벌하고 민원인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되레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백 번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여성 민원인이나 동료 여경에게 성적 피해를 하는 경찰관들은 일반 백제가 마땅하다. 아울러 예방책 마련도 절실하다. 여학생이나 부녀자 보호 업무에는 여경을 우선 투입하고 있다지만 대상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이면 부산 사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여성 민원인 관련 사건은 가급적이면 여경들이 맡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無等鼓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입속 에 넣는 듯한 느낌을 준다. ...총략” ‘죽 배기찌’ 테이블에 올라온다. 팔뚝 굵은 우윳빛 수프 안에 담긴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솟아올라와 있다.”

오래된 음식인 듯하지만 삼계탕(蔘鷄湯)이라는 명칭이 생긴 지는 5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다. 애초 ‘닭국’ 혹은 ‘백숙’이라고 불렸으나 한국전쟁 이후에 인삼의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삼(蔘) 자를 넣어 ‘삼계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던 것이 이내 안으로 들어왔다’

삼계탕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고려시대에 삼계탕과 비슷한 음식을 원기 회복 음식으로 먹었다는 설이 있다. 또 1542년 경북 풍기군 수주세봉이 소백산에서 산삼 종자를 채취, 주민들에게 재배토록 한 기록이 있다. 그 이후 풍기는 인삼으로 유명해졌고, 인삼이 많다 보니 닭과 인삼을 끓인 음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다.

삼계탕을 정확히 묘사한 기록으로는 조선 말기 개화파 김윤식의 저서 ‘속음청사’에 보인다. 닭에 인삼을 넣고 푹 고운 삼계고(蔘鷄羹)란 이름이 나오는

국인이 많은 대사관이나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는 아예 ‘삼’ 자를 앞에 내세워 ‘삼계탕’으로 바뀌 불렀다.

이는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한국 인삼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음식점들의 전략이었다. 이로써 건강 음식이라는 이미지에 고급 음식이라는 느낌까지 더해져 인기가 상승했다고 한다.

전남산(산조화인코리아) 삼계탕이 며칠 전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삼계탕이 K뷰티(한국화장품)나 김치처럼 한류를 이끄는 명물이 되길 바란다. /채희종기자 chae@

기 고



장영주 전 광주교통방송본부장

광주의 교통문화, 사람중심으로

차도 이 성역을 침범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횡단보도에 버젓이 주차하는 간 큰 운전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는 운전자, 차량 뒷바퀴와 차체를 횡단보도에 걸쳐놓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들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로 위험스럽게 횡단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자동차 높이에 가려서 그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위험스럽게 짝이 없다.

운전자들은 한 술 더 떠서 보행자들을 무시한다. 횡단보도를 힘겹게 걷고 있는 노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등 보행자를 뒤달하듯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하면서 거칠게 운전한다. 보행권은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왜 이런 운전자의 모습을 접해야 할까? 자동차 위주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그동안 교통문화, 몸에 밴 운전 조급증, 운전자들이 보행권을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운전자들의 머릿속에는 보행인보다는 자동차가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꼭 차 있는 것이다. 제발 잘못된 생각을 바꾸자.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있고, 교통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다. ‘자동차보다 사

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고쳐야한다.

광주의 교통정책과 시설은 디지털 시대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 대표적인 교통 시설인 육교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광주 시내에는 육교가 약 60개 있다. 육교는 ‘자동차 소통위주’로 만들어진 매우 상징적인 교통시설이다.

일부 육교는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육교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시설로 보행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대표적 인프라다. 서구 농성도에 있는 상록회관 앞 육교를 보자. 이곳은 편도 4차로에 경사로가 없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육교이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할 수 없다. 또한,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은 육교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특히 겨울에 눈이 쌓이거나 얼게 되면 육교 계단을 통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행자에게는 큰 절벽이자 위험시설이다.

수도 서울에서 육교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서울시는 이미 ‘걷기 쉬운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에 걸 맞는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다행히 광주에서도 육교를 철거하고 보행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어 반갑다. 광주도 도시육교, 승정육교, 승정우회육교, 남구 씨티빙

원 앞 육교 등이 지난해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몇 해 전 운임동에 있는 육교 2개도 철거됐다. 보행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운전자들도 “무단횡단 하는 보행인이 없어 사고위험이 줄었다”며 반기고 있다. 육교를 관리하는 구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협업을 한 좋은 결과물이다.

하지만 만족하기에는 이른다. 과몰 같은 철재육교를 철거하고 그곳에 보행인, 특히 고령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게 바로 보행권 보장이다. 이곳은 운전자용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흐름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디지털이 대체다. 세상이 디지털 기기 하나로 통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은 인간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안겨 주고 있다. 광주의 교통정책과 문화도 디지털 세상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아니, 한걸음 더 앞서가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민선 6기 운장현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광주의 교통정책을 사람중심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정말 감동한다. 광주 교통문화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중심으로 가야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